World Economy Today

KIEP
오늘의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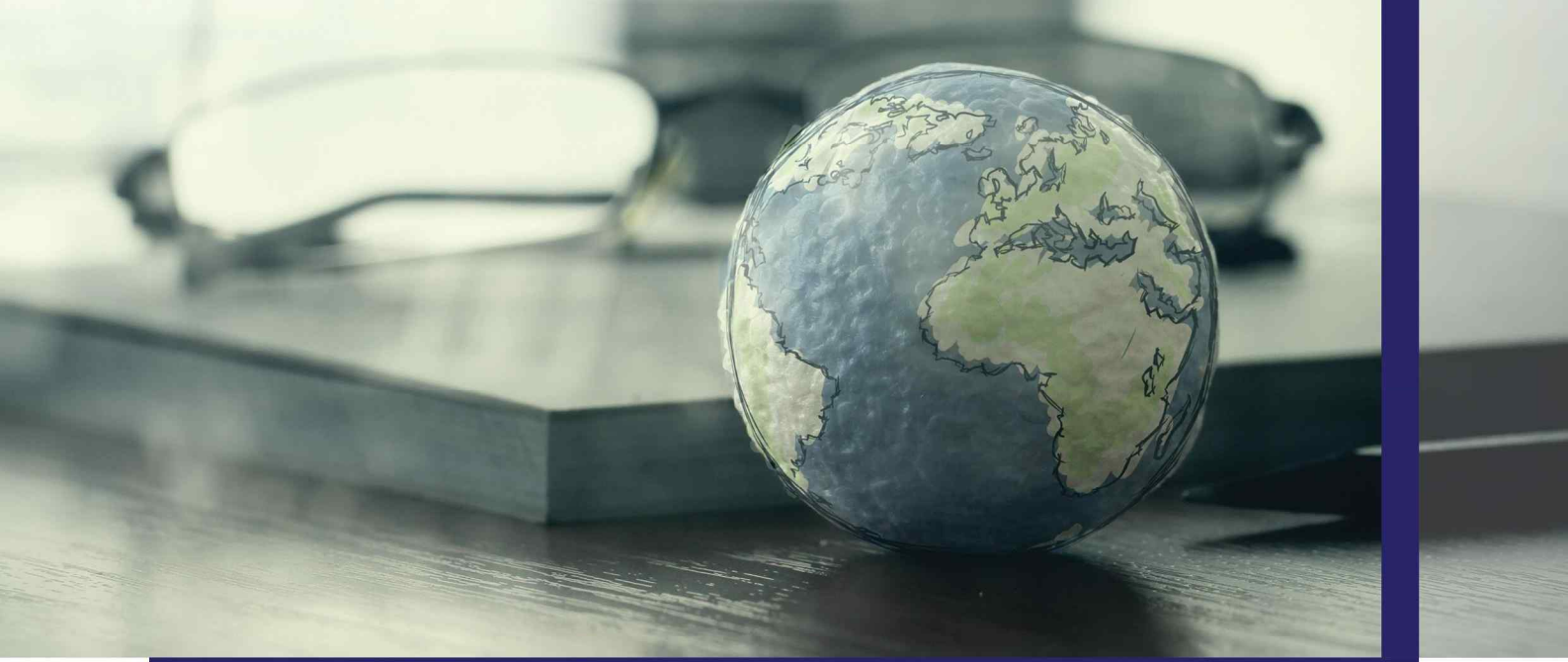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2년 8월 24일 Vol. 22 No.13

ISSN 1976-0515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현상백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장 (sbhyun@kiep.go.kr, Tel: 044-414-1284)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선임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044-414-1121)
정지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장 (jhjung@kiep.go.kr, Tel: 044-414-1280)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한·중 경제관계 발전 개관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무역, 투자, 금융·통화
3. 시사점

주요 내용

▶ [개요]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양국의 경제협력 규모와 범위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함(2021년 기준).

-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세계화 흐름 속에 한·중 경제협력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 간 생산 네트워크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어 한·중 경제협력 패러다임에 전환이 필요함.

▶ [성과 및 과제] 한·중 경제협력은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무역과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고 금융·통화 등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적·질적으로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나,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와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협력 모델은 한계에 직면함.

- [무역]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던 한·중 무역은 중국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자립 전략에 따라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미·중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상호 공급망 의존도의 비대칭성 심화,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한 과도한 편중 등이 중요 과제로 부상함.
- [투자]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 내 투자 환경 및 정책 변화에 따라 투자 붐과 조정기를 거치다가 최근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대형화의 특징을 보이면서 2021년 역대 최고치인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면서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가 저하되는 등 기존 협력 모델이 한계에 이름.
- [금융] 한·중 금융협력은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은행업을 중심으로 진출하다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통화 스와프, AIIB 설립 참여 등 금융 당국간 협력으로 확대되었고, 최근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진출과 자본시장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 양극화, 원/위안화 무역결제의 낮은 활용률 등의 과제에 직면함.

▶ [시사점]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지난 30년간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를 극복하면서 고도화하고 신모멘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중 경협은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다자 체제에서의 개방·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한·중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함.
-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무역] 상호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및 채널 구축, 무역구조의 질적 제고, 한·중 FTA를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투자] 신산업·서비스업 등 대중 투자 신모멘텀 창출, M&A 등 투자방식의 다각화, 중국자본 활용; [금융] 디지털·녹색 금융의 신협력 모색, 원/위안화 통화·금융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함.

1. 한·중 경제관계 발전 개관

■ **[한·중 관계 발전]** 한·중 관계는 1992년 8월 24일 수교 이후 30년간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외교, 경제,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음.

- [외교관계] 한·중 외교관계는 수교 초기('92년) '우호협력 관계'로 시작하여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로, 2003년에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어 양자 문제를 넘어서 다자 및 지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함.[1)]
- [경제 교류]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노동력·시장과 한국의 기술·자본이 결합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해 옴.
  - ○ 2021년 한·중 무역액과 한국의 대중 투자(누계)액은 1992년 대비 각각 47배, 394배로 성장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2대 투자대상국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1992년 7위)으로 부상함.
  - ○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 승인(2001년 9월),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인정(2005년 11월),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 발효 및 중국 주도의 AIIB 참여 등 다양한 경제 교류를 진행하고 있음.
- [인적 교류] 한·중 간 인적 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 13만 명에서 2019년 1,037만 명(방중 한국인 435만 명, 방한 중국인 602만 명)으로 약 80배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함.

■ **[경제협력 발전 과정]**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은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성장기(2001~14년)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등 3단계 발전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으며, 각 단계에서 성장과 조정의 과정을 거침.

- [초기 협력기(1992~2000년)] 중국이 덩샤오핑의 남순강화('92년 초) 이후 대외개방 전략을 적극 추진하였고, 국제대순환론에 입각한 가공무역 중시전략을 취하면서 중국을 가공무역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무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 ○ 한국은 전자부품, 철강, 합성수지, 섬유 등 중국의 초기 수출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의류, 광물 등 소비재와 자원을 수입하는 수평적 무역구조를 유지함.
  - ○ 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저렴한 토지, 세금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한국은 세계화 전략 아래 섬유·의류, 피혁, 액세서리 등 노동집약적 임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에 진출함.
  - ○ 대중국 진출은 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적으며, 중국 동포가 거주하는 동북3성, 산둥(山東)성, 톈진시 지역 등 가공무역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 무역협정과 투자 보호 및 장려 협정('92년 9월), 이중과세방지협정('94년 6월) 등 투자와 무역 관련 기본 협정이 체결됨.
- [성장기(2001~14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 공장 및 시장으로서 중국의 지위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져 한·중 경제협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함.

1) 현상백 외(2017. 8. 18),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5.

○ 2002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03년에는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2007년에는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함.

○ 한국 대기업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장쑤, 광둥 등 중국 대도시 및 동부연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중국 본사 및 판매·생산 거점을 설치하였고,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하는 선단식 투자가 이루어진 시기임.

○ 한·중 무역과 투자 규모 확대에 맞추어 '한·중 무역·투자 협력 확대 양해각서' 체결 및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05년 11월), 한·중 FTA 체결 논의('04년 공동연구 개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체결 등 대대적인 경제협력 환경 정비작업이 이루어짐.

○ 다만 중국의 토지·노동력 비용 인상 및 중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 등에 따라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과 임가공 중소기업 위주로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부 기업의 비정상적인 철수('야반도주')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 [성숙과 전환기(2015년~현재)] 중국 수입대체 전략 추진과 산업 고도화로 한·중 경제협력이 성숙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글로벌 환경이 악화되고, 중국의 경쟁력 제고로 양자관계도 보완 관계에서 점차 경쟁관계로 전환되면서 한·중 경제협력이 대전환기를 맞이함.

○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체결('15년 6월) 및 발효('15년 12월)를 통해 한·중 간 교역·투자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투자/서비스 협상을 진행('18년 3월~)하고 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AIIB 가입 등 금융·통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 가운데 이러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2021년 한·중 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3천억 달러를 넘어섬.

○ 중국은 내수주도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제조업 고도화 및 신흥산업 육성을 목표로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홍색 공급망'[2]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한·중 경제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전환되고 있음.

○ 한·중 경쟁관계의 심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제고, 신성장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인해 한·중 교역의 핵심인 중간재 교역의 성장성이 하락하면서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대중국 무역수지 역시 흑자에서 균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사드 배치 결정('16년 7월) 이후 양자간 갈등 증대, 미·중 전략 경쟁,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의 부분적인 탈중국 및 사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 배경]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 8월 24일)을 계기로 지난 30년간 양국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를 무역, 투자, 통화·금융 등 분야별로 정리하고,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집권 3기 체제(2022년 10월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쌍순환 전략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발전전략 전환,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돌발적 변수 증대, 중국산업 고도화에 따른 한·중 분업구조의 근본적 변화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무역, 투자, 금융·통화 분야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 구축은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중국이 수입해 온 중간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여 '중국 기업들로만 이루어진 완결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중국의 수입대체화 또는 국산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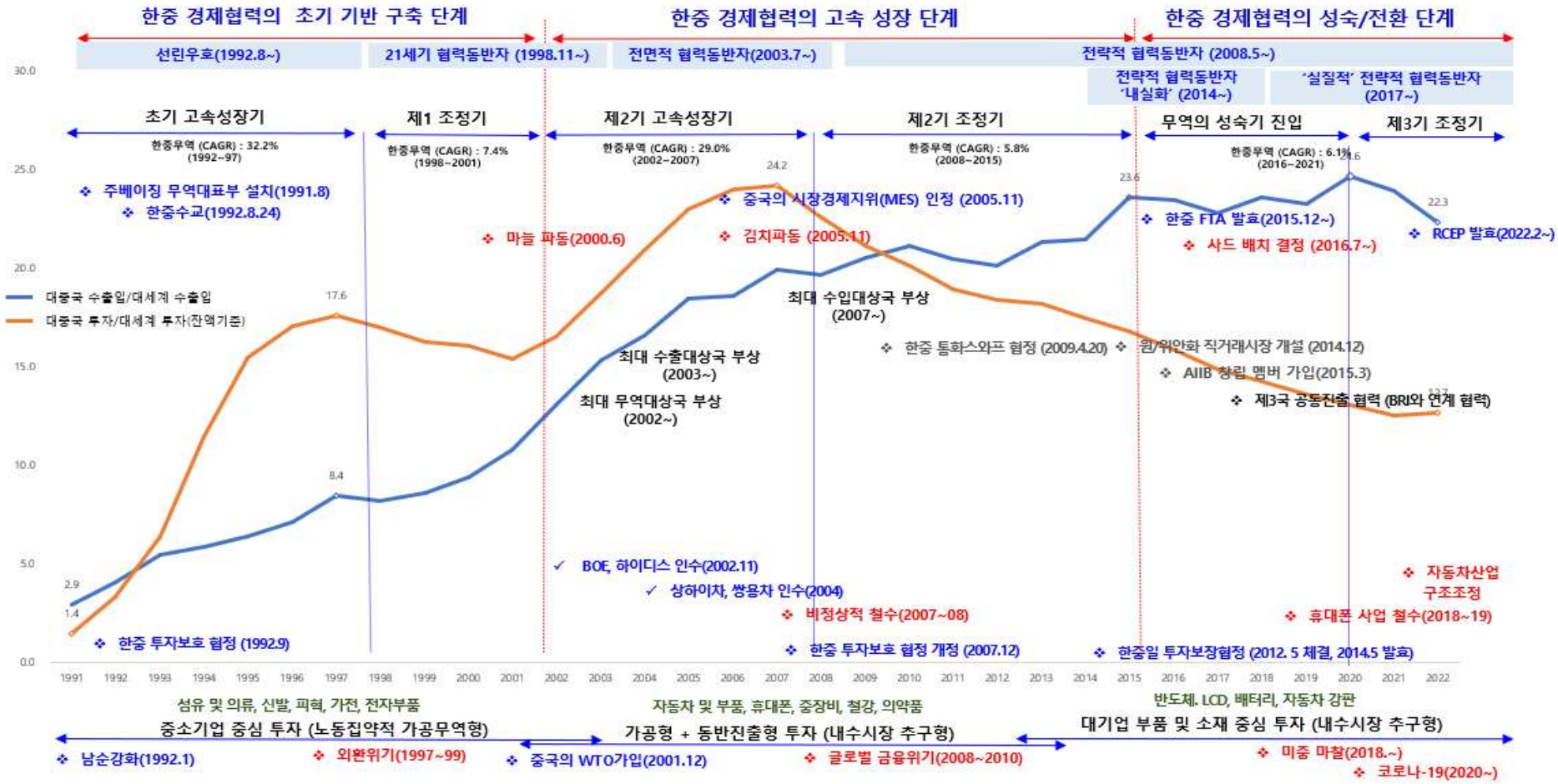
표 1. 한·중 경제협력 발전 단계

분야	협력 기반 구축 단계 (1.0시대: 1992~2000년)	경제협력 고속 성장 단계 (2.0시대: 2001~14년)	경제협력의 성숙과 전환 단계 (3.0시대: 2015년~현재)
외교 관계	v 한·중 수교(1992.8.24) v 선린우호관계(1992.8) v 21세기 협력동반자(1998.11)	v 전면적 협력동반자(2003.7) v 전략적 협력동반자(2008.5~)	v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2014) v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2017~) v 상호존중의 협력관계 구축(2022~)
기회와 도전	v (중)국제 대순환전략과 남순강화(1992.1) v (한)북방정책과 세계화	v 중국의 WTO 가입(2001.12)과 내수 개방 v 중국의 G2 부상(2010~) v (한)중국 시장경제지위 부여(2005.11)	v 한·중 FTA 발효(2015.12) v 한·중 FTA 2단계(투자/서비스) 협상 추진
	v 외환위기(1998~99)	v 글로벌 금융위기(2008~09)	v 사드 갈등(2016.7~) v 미·중 마찰(2018~), IPEF 참여 (2022.5~) v 코로나19(2019~), 우크라이나 사태 (2022.2~)
중국 위상 변화	v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기 v (중)'세계의 공장' 부상	v 중국경제의 고속 성장(2001~08) v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 전환(2009~) v (중)수출 대국, 소비 대국 부상	v (중)중고속 성장, 공급측 구조개혁, 중국제조 2025, 쌍순환 전략 v (중)일대일로 전략 추진(2015~)
대중국 교역	v 상품무역 중심 교역 v 가공무역 위주	v 상품+서비스 무역 확대 v 가공무역→일반무역으로 확대	v 한·중 교역 3,000억 달러 + 서비스 무역 성장 v 중국 내수용 무역 확대
	v 전자부품, 철강, 섬유, 합성수지 중심	v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중심 교역	v 첨단 부품 및 소재 교역
	v 중국 산둥, 랴오닝, 광둥 중심	v 중국 산둥, 장쑤, 광둥 중심	v 중국 산둥, 장쑤, 광둥, 산시(山西)
	v 무역불균형 확대		v 무역불균형 축소
대중국 투자	v 한국의 일방적 대중국 투자 v 외환위기와 대중 투자 조정 v 다다익선 외국인투자 정책	v 내수형 대중 투자 확대 v 중소기업 구조조정(비정상철수 2007~08) v 선별적 외국인투자 유치	v 대중 직접투자 성숙단계 v 대기업 구조조정(2018~) v 상호 자본시장 투자 확대
	v 중소기업 중심 v 중국 동부 연해 중심 v 노동집약형 가공·조립 산업 투자	v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 동반 진출 v 중국 동부 연해, 중서부 진출 개시 v 중대형 산업 투자(자동차, 휴대폰 등)	v 대기업+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벤처 협력 v 중국 중서부 지역 투자 확대 v 첨단 부품·소재, R&D, 신산업, 서비스업
	v 한국의 일방적 대중국 직접투자 v 한·중 투자보호협정(1992.9)	v (중)해외진출 전략 →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v 한·중 투자보장협정 개정(2008) v 한·중·일 투자보장협정(2012. 8 체결, 2014. 5 발효)	v 직접투자 쌍방 확대, 자본시장 투자 v 제3국 공동진출 협력(BRI와 연계 협력)
	v 지리적 근접성: 중국 연해 지역	v 내수시장 및 산업입지: 중국 연해 및 중서부	v 중국 지역발전 전략: 중국 중서부
산업 협력 분야	v 전통 제조(경공업, 전기전자, 철강, 화학) v (중)소비재 수출산업화	v 전통 및 첨단 제조(ICT, 자동차, 반도체, 통신) v (중)중간재 수입대체 추진	v 신산업, 소재 및 부품, 고부가가치 협력 v (중)전방위 수입대체, 수출산업 고도화 v 한·중 산업단지 협력(2015.10)
금융	v 금융(은행)의 중국 지점 진출	v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2009.4) v QFII 자격 취득	v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2014.12) v RQFII 자격 취득 v AIIB 창립회원 가입(2015.6)
협력 관계	v 보완적 협력자 v 수평적 분업 v (한)자본, 기술-(중)노동력 결합 v 양자 협력(무역, 투자)	v 보완적 협력자 → 경쟁적 협력관계 전환 v 수평적 협력 + 수직적 분업 v (한)기술-(중)시장 결합 v 양자 및 지역 경제통합 협력 논의 (CJK, RCEP)	v 경쟁적 협력자 v 수직적 분업(산업 내 무역) v (한)기술-(중)자본, 시장 결합 v 다자 및 제3국 협력: BRI, 제3국 공동진출, RCEP

주: (한)은 한국 측 입장에서, (중)은 중국 측 입장에서 서술하였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한·중 경제관계 발전 과정

(단위: %)



주: 2022년 무역 비중은 1~6월 중의 비중, 해외투자 잔액 비중은 3월 말 기준임.
자료: CEIC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한·중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무역, 투자, 금융·통화

가. 무역

1) 현황

■ 한·중 교역 규모는 수교 이후 연평균 14%씩 증가하여 2021년 3,01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상호 중요한 교역대상국 지위가 유지되고 있음.

- 한·중 무역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5년 1,000억 달러, 2010년 2,000억 달러, 2021년 3,00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하여 수교 이후 47배 성장하였으며, 특히 대중 수출 규모는 60배 이상 증가함.
-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2007년 이후 최대 수입대상국이며, 현재까지 최대 교역대상국임.
- 한국은 2013년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에는 2~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교역에서는 중국의 3위 교역대상국임.

그림 2. 한·중 무역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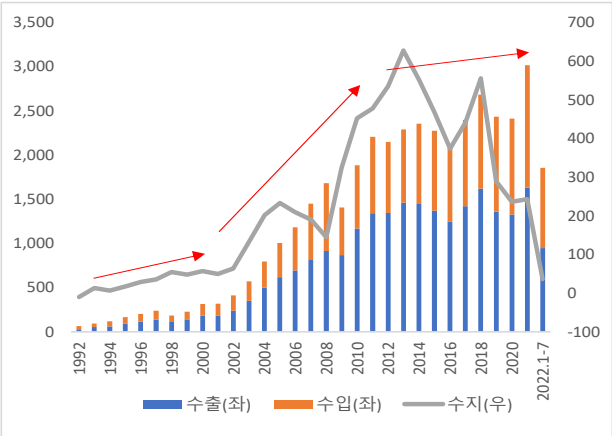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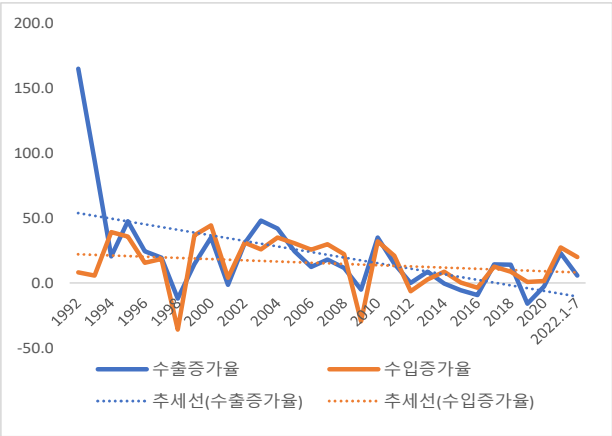


그림 3. 한·중 수출입 성장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그러나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기술 발전으로 한·중 무역은 2000년대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013년 628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2년 5월에는 적자가 가시화됨.

- 수교 이후 한·중 간 수출입 증가율은 모두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추세적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변화함.
  - ○ 2010년대 접어들어 나타난 이러한 무역수지의 추이 변화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제조업 기술력 상승,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체제 구축 및 현지조달 증가, 한국 상품의 경쟁력 약화 등에 기인함.
- 1993년부터 지속되어 온 대중 무역흑자는 29년 만인 2022년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5~7월) 적자로 전환됨.[3)]

○ 2022년 5월의 무역적자 규모는 10억 9,359만 달러, 6월 적자는 12억 1,612만 달러, 7월 적자는 5억 9,614만 달러임.[4)]

○ 최근 무역적자는 중국의 경기둔화, 한국의 높은 수입 의존도,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21년 한·중 서비스 교역 역시 수교 이후 최고치인 43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2014년 79억 5천만 달러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양국의 서비스 교역은 2012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흑자구조가 유지되었고, 특히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여행수지 흑자가 2014년 서비스 수지 흑자의 89.7%인 71억 3천만 달러에 달함.
  ○ 사드(THAAD) 이슈로 2017년 대중국 여행서비스 수출이 전년대비 45% 급감하는 등 큰 영향을 받으면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기록함.
  ○ 한편 지식재산권 사용료 흑자는 2017년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함.
- 대중국 서비스 수지 흑자는 주로 운송, 여행,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견인하고 있으나,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방침으로 2020~21년 여행 수지가 크게 감소함.
- 한국의 서비스 수출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2016년 21.7%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서비스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속 상승하여 2021년 15.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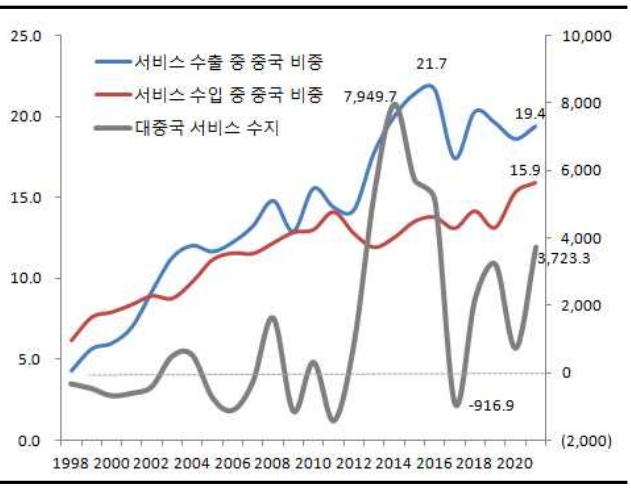
표 2. 한·중 서비스 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서비스 수출	서비스 수입	서비스 수지
1998	1,185	1,505	-320
2000	1,958	2,632	-674
2005	5,889	6,622	-733
2010	12,899	12,583	316
2015	20,822	15,112	5,709
2020	16,662	15,928	733
2021	23,463	19,740	3,723
연평균 성장률	13.9	11.8	-

그림 4. 한국의 서비스 교역 중 중국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주: 한·중 서비스무역 통계는 1998년부터 제공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무역 통계.

3) 5월 무역적자 규모는 10억 9,900만 달러, 6월 적자는 12억 1,400만 달러, 7월 적자는 5억 7,000만 달러이며, 8월 1~10일 적자는 8억 9,000만 달러임. 『국제신문』(2022. 8. 17), 「대중 무역수지 적자, 해법은 대체불가 기술뿐」.
4) 한국무역협회(K-stat).

2) 구조 변화

■ [품목 고도화 및 편중] 한·중 간 수출입 품목 모두 반도체 등 ICT 제품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이 수입 품목에 비해 상위 품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

- 대중 수출 품목은 수교 당시에는 공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위주였으나, 2021년에는 반도체 비중이 30.8%로 급증하였고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컴퓨터 등 ICT 제품과 화학제품이 주를 이룸.
  - ○ 대중국 수출품 중 ICT 제품의 비중은 1992년 9.4%에서 2018년 50%로 상승함.
-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구조 심화 및 중국의 중간재 제조 경쟁력 상승에 따라 대중 수입품목 역시 농·광산물 중심에서 반도체(16.8%), 컴퓨터 등 ICT 제품과 화학·소재 위주로 변화함.
- 수교 이후, 대중 수출 상위 3대 및 10대 품목 비중이 각각 35.9%→41.8%, 61.5%→65.0%로 모두 상승한 반면 대중 수입 상위 3대 품목 비중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대 품목 비중은 오히려 더 낮아져 중국의 대한국 수출 품목이 더욱 다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 한국의 수출 우위 품목이 반도체로 집중되면서 한국의 우위 품목 수는 축소됨.

표 3.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1992년		2021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철강판	420 (15.8)	반도체	50,236 (30.8)
합성수지	299 (11.3)	합성수지	9,897 (6.1)
선재봉강 및 철근	235 (8.9)	무선통신기기	7,894 (4.8)
가죽	141 (5.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7,739 (4.8)
인조섬유	130 (4.9)	석유제품	6,842 (4.2)
인조장섬유 직물	98 (3.7)	석유화학 중간원료	5,029 (3.1)
종이제품	90 (3.4)	비누치약 및 화장품	4,898 (3.0)
섬유 및 화학기계	76 (2.9)	반도체 제조용장비	4,645 (2.9)
석유제품	74 (2.8)	컴퓨터	4,402 (2.7)
기타 석유화학제품	69 (2.6)	기초유분	4,278 (2.6)
상위3대 비중	35.9	상위3대 비중	41.8
상위10대 비중	61.5	상위10대 비중	65.0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음영 부분은 대중 10대 수입품목과 중복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표 4. 한국의 대중 10대 수입품목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1992년		2021년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식물성 물질	657 (17.6)	반도체	23,330 (16.8)
원유	223 (6.0)	컴퓨터	9,835 (7.1)
인조단섬유 직물	222 (6.0)	정밀화학원료	8,700 (6.3)
시멘트	214 (5.7)	무선통신기기	7,360 (5.3)
석탄	210 (5.6)	산업용 전기기기	4,960 (3.6)
견직물	178 (4.8)	철강판	4,635 (3.3)
곡식류	142 (3.8)	의류	3,742 (2.7)
정밀화학원료	107 (2.9)	건전지 및 축전지	3,362 (2.4)
면직물	103 (2.8)	자동차부품	2,177 (1.6)
기타 농산물	103 (2.8)	가구	2,102 (1.5)
상위3대 비중	29.6	상위3대 비중	30.2
상위10대 비중	58.0	상위10대 비중	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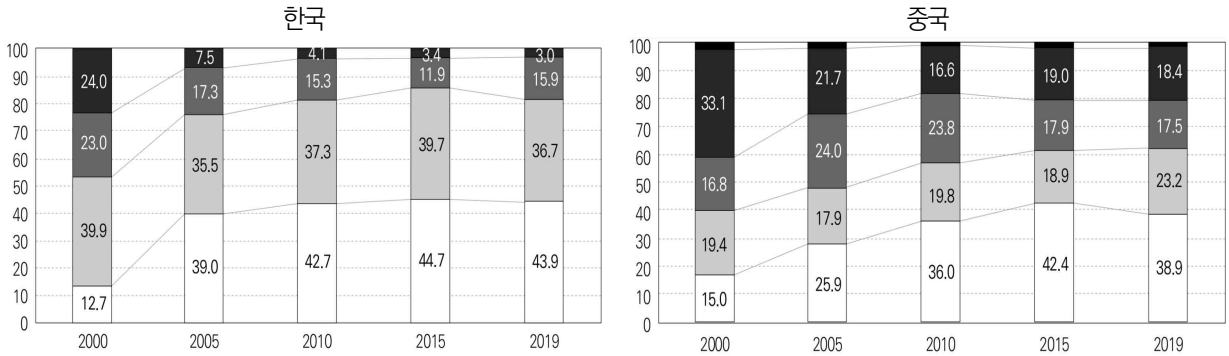
주: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음영 부분은 대중 10대 수출품목 중복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기술수준 고도화 및 경쟁 심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한·중 간 무역구조가 고위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었으며, 중국의 수출 경쟁력 제고로 한·중 양국간 경쟁이 심화됨.

- 양국 모두 상호 수출에서 고위기술 품목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위기술 품목 중 반도체 의존도가 한국은 63.9%, 중국은 43.6%에 달하여 반도체 중심 구조가 심화됨.[5)]
  - ○ 한편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고위기술 업종 비중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중저위/저위기술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5. 한·중 간 기술 수준별 수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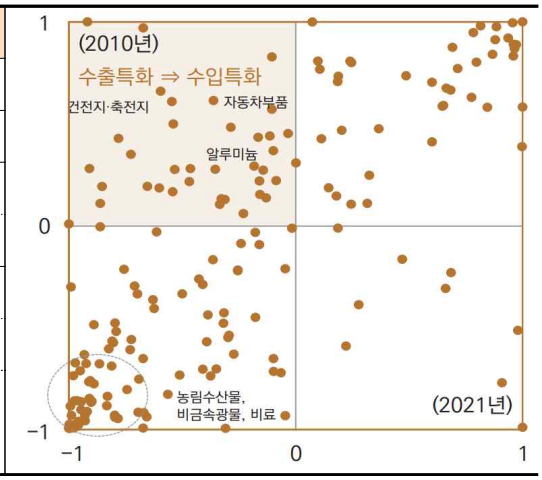


주: □ 고위기술 ▭ 중고위기술 ■ 중저위기술 ■ 저위기술
자료: 산업연구원(2021),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표 5. 한국의 대중국 기술 수준별 수출 경쟁력

업종/품목	2011	2021
저위	상대적 경쟁열위	절대적 경쟁열위
중저위	경합	경합
중고위	상대적 경쟁우위	경합
화학	절대적 경쟁우위	상대적 경쟁우위
고위	상대적 경쟁우위	경합
의료/정밀광학기기	절대적 경쟁우위	상대적 경쟁우위
전자통신	경합	상대적 경쟁우위
(반도체)	상대적 경쟁우위	상대적 경쟁우위

그림 6. 한국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TSI)



주: 1) TSI < -0.5: 절대적 경쟁열위; -0.5≤TSI < -0.25: 상대적 경쟁열위, -0.25≤TSI < 0.25: 경합, 0.25≤TSI < 0.5: 상대적 경쟁우위, TSI≥0.5: 절대적 경쟁우위.
2) [그림 6]의 가로축은 2021년도 무역특화지수이며 세로축은 2010년 무역특화지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2021),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한국은행(2022),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5) 한국의 생산기지가 ASEAN 등으로 이전하면서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 가전, 컴퓨터 등 비중이 점차 하락하였고, 중국의 로컬 업체 부상과 우리 기업의 현지생산 증가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디스플레이 등의 비중이 하락함. 산업연구원(2021),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 변화 전망과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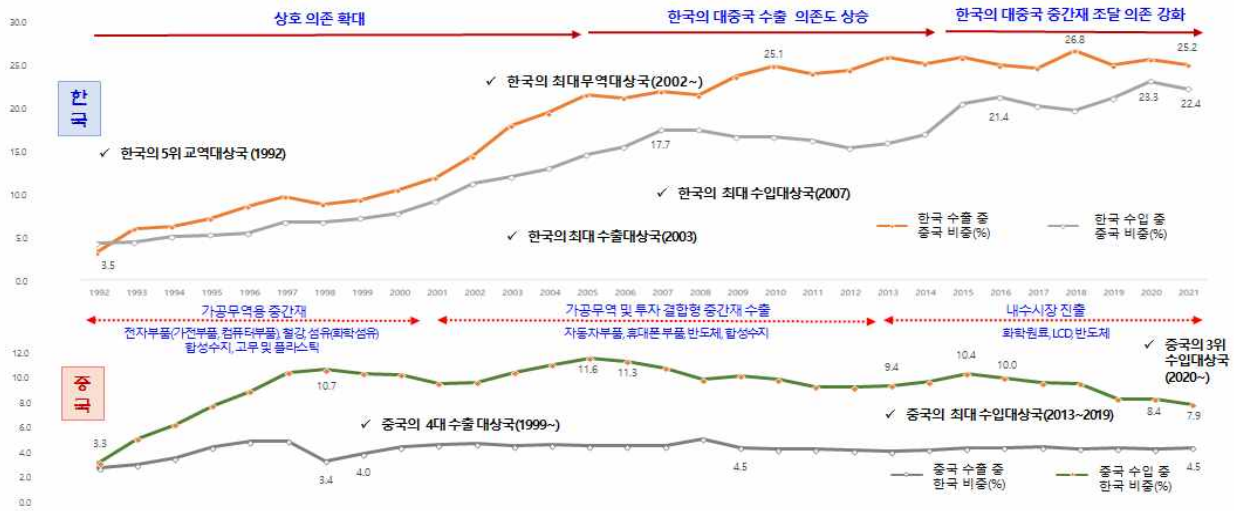
- 상대적 수출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TSI)[6]의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은 중고위 및 고위 기술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됨.
  - ○ 중고위기술 업종 중 화학, 고위기술 업종 중 의료/정밀광학기기, 전자통신(반도체)은 중국에 대해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으나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등은 경합관계로 전환됨.
- 또한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다수 품목이 수출특화(수출>수입)에서 수입특화(수출<수입) 구조로 전환되면서 2021년 무역수지가 2010년 대비 하락함.[7]

3) 현안 과제

■ [의존도 비대칭성 심화] 한·중 간 무역의존도가 수교 이후 모두 빠르게 증대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상호 비대칭이 심화됨.

- 수교 직후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를 중심으로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지속 확대되었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이러한 상호 의존도 증가 추이가 지속됨.
  - ○ 1992년 3.3%에 불과하던 중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1998년 10.7%로 급증함.
  - ○ 1992년 3.5%였던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1년 12.1%로, 2005년 21.8%까지 급증함.

그림 7. 한·중 무역의 발전 과정 및 상호 수출입 의존도 추이



자료: 저자 작성.

-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점진적 상승 추세를, 2010년대 중반부터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21년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각각 25.2% 및 22.4%까지 상승함.

---

6)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되며,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짐.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상태를 나타냄.

7) 한국은행(2022), 「우리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조사통계월보』, 6월호 논고,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1/view.do?nttId=10071417&menuNo=200438(검색일: 2022. 8. 20).

○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005년 21.8%에서 2010년 25.1%로, 2018년 26.8%로 확대된 이후 2021년 25.2%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2007년 17.7%에서 2014년 17.1%로 정체되었으나, 2016년 21.4%로, 2020년에는 23.3%로 상승함.

- WTO에 가입한 중국의 세계무역 내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의존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 특히 중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는 2005년 11.6%를 정점으로 2021년 7.9%까지 하락함.

○ 중국의 대한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4%대를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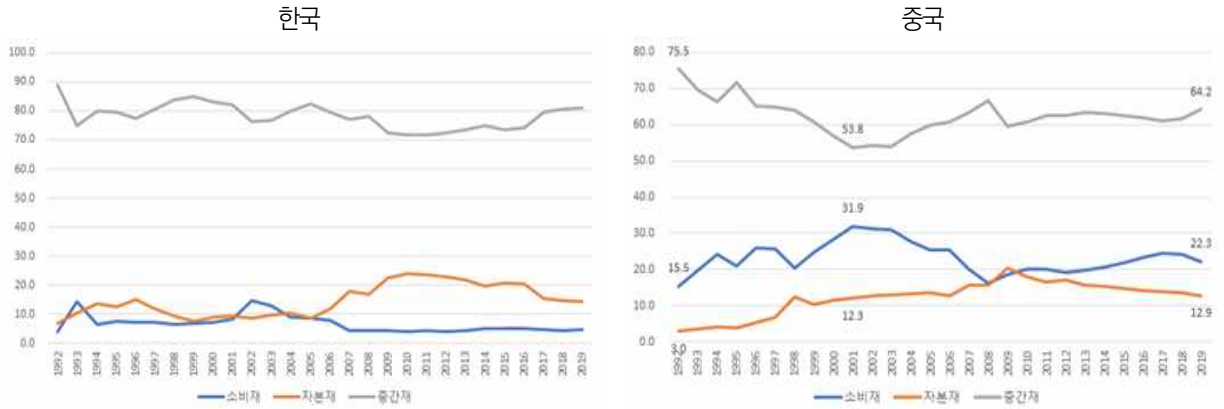
■ [중간재 수입 의존도 심화] 수교 이후 한·중 교역은 중간재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의존도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측면에서도 빠르게 상승함.

- 한·중 교역구조를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수교 이후 줄곧 70~8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한국 수출에서도 중간재 비중이 대체로 50~60%대를 유지함.

○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78%, 중국의 대한국 수출의 65% 이상이 중간재에 집중됨.

그림 8. 한·중 간 가공단계별 수출구조 변화 추이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특히 한국의 중간재 수출 중 부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2000년대 초중반 급증한 이후 현재까지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 의존도는 수교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수입대체가 확대된 200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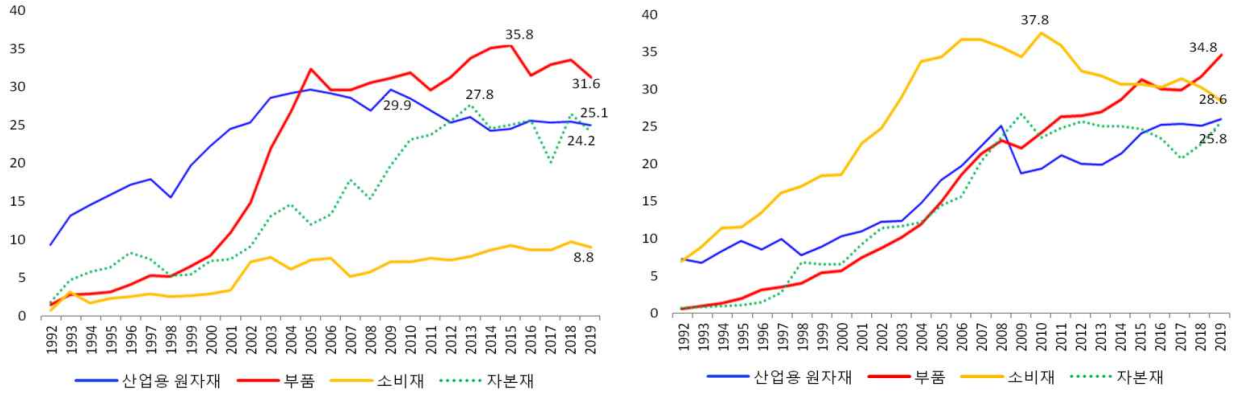
- 한편 한국의 중간재 수입 중 대중국 의존도는 수교 당시 4.7%에서 2020년 28.3%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부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소비재 및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추세와 대조적임.

○ 대중국 부품 수입은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산업용 원자재 수입은 광물 등 다양한 현지 자원을 가공한 품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9. 가공단계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단위: %)

수출 의존도 수입 의존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공급망 리스크 관리] 팬데믹으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된 이후 중국의 도시 봉쇄방침 장기화 및 탈탄소 전략에 따른 한국의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중시됨.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인 도시 봉쇄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2022년 2월, 한국은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HS 854430)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됨.
- 중국의 전력난 및 석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중국 비료 품목 29종(요소, 칼륨, 인산비료 등)에 대한 수출 검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은 요소수 공급망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더욱 중시하게 됨.
- 중국의 대한국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업종은 반도체, 기초화학 제품, 금속화합물, 식물성 섬유 등이며, 특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음.
  - ○ 중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OLED) 관련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국 역시 대중 무역,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데, 반도체를 제외한 대중무역 수지는 2021년 이미 적자로 전환됨.

그림 10. 대중국 무역의 반도체 의존도

반도체를 제외한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변화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증가율

자료: 하이투자증권(2022. 7. 5),「대중국, 무역 흑자 기조가 흔들린다」.

■ [낮은 한·중 FTA 활용도] 2015년 12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 차원에서 한·중 FTA를 발효시켰으나, 무역과 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한·중 FTA가 여전히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 있음.

- 한·중 FTA 상품 분야 관세 인하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한·중 FTA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한국의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한·중 FTA 활용률은 64.7%(한·미 FTA 85%, 한·EU FTA 88%)이지만, 수입에서의 활용률은 87.0%에 달함.
  -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분야에서 중국의 관세 인하(한·중 FTA 발효 7년 차 이후 관세 인하 시작)가 더디기 때문임.
- 2017년 12월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8년 3월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10월까지 양측은 9차례의 공식 협상을 실시하고 서비스·투자·금융 등 분야 의제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교환하는 데 그침.
  - ○ 한국과 중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한국은 2월 1일)에 발효되어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구축에 부분적이나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개방 수준이 낮아 한·중 무역과 경제협력 증대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임.

나. 투자

1) 현황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2년 수교 당시 1억 4천만 달러에서 2021년 66억 8천만 달러로 약 48.5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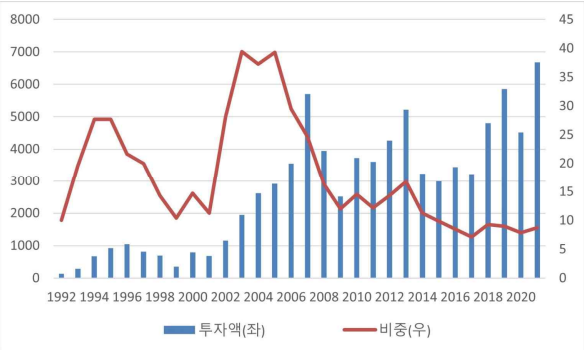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규모가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매년 30억~60억 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함.
  - ○ 2007년(57억 달러), 2013년(52억 달러), 2019년(58.3억 달러) 세 차례의 정점을 지났으며, 2021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6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 2021년 대중국 투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제조업 투자가 5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반도체, 전기차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데 기인함.
- 한국 해외 투자액 중 대중국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10%에서 2003년 39.4%(역대 최대치), 2005년 39.3%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 8.7%로 감소함.
  - ○ 신규법인 수도 2006년 2,389개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면서 2021년에는 262개를 기록함.
  - ○ 대중국 투자 비중의 하락세는 중국 내 임금 및 임차료 등 생산 비용 상승, 중국 로컬 업체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익성 악화,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중국 내 전통 제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북미, 아세안 등 지역으로 다변화한 데 기인함.

■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규모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도착금액)은 1992년 약 28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2011년 1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나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 2015년에는 17억 7천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7억 9천만 달러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21년에는 4,774만 달러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8)]
- 2020년 중국의 대세계 투자(1537억 1천만 달러)에서 한국(1억 3,9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0.9%[9)]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 2020년 중국의 신규 해외 직접투자는 홍콩(58%), 아세안(10.4%), EU(6.6%), 미국(3.9%) 등에 집중됨.[10)]

그림 11.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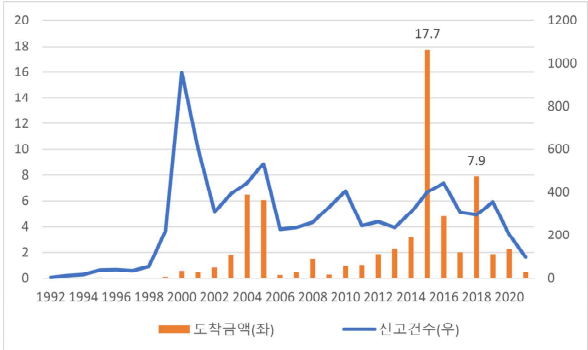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2.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좌), 건(우))



주: 신고건수는 도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한·중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글로벌 경제협력의 시대적 환경 변화 △양국 경제·산업 비교우위 변화 △중국 시장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침.**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주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는 양국간 생산 네트워크가 긴밀히 연계되고 한·중 무역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매입과 매출 구조를 바탕으로 재중 한국기업의 원부자재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최소 33.4~38.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11)]
- 한국의 대중국 투자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① 1차 대중국 투자 붐과 조정 단계(1992~2000년) ② 2차 대중국 투자 붐과 조정 단계(2001~10년) ③ 제3차 대중국 투자 붐과 성숙 단계(2011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음.
  - ○ [1992~2000년] 중소기업 주도의 가공무역형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삼성전자, LG전자의 가전제품 제조공장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져 1차 대중국 투자 붐이 형성되었으나,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중 투자가 급락하는 1차 조정기에 들어감.

---

8)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https://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검색일: 2022. 8. 15).
9) WIND 통계 활용하여 저자 계산.
10) 중국 상무부, 「2020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p. 33, http://www.gov.cn/xinwen/2021-09/29/5639984/files/a3015be4dc1f45458513ab39691d37dd.pdf(검색일: 2022. 8. 15). 2021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11) 양평섭(2020. 7. 7), 「최근 대중국 수출 급감의 원인과 과제」, 『오늘의 세계경제』, Vol. 20, No. 19, p. 9.

○ [2001~10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12]의 동반 진출이 확대되고, 저임금을 활용한 가공무역 목적뿐만 아니라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도 점차 확대되어 2차 투자 붐이 형성되었으나, 중국 내 생산비용 상승과 외자정책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2차 조정기에 진입함.

○ [2011~21년] 대기업 주도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LCD,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강판 등의 대형 투자가 이루어져 대중 투자가 성숙화·첨단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2018년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최근 중국 내 정책·규제 리스크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ODI)는 지속 증가하여 2020년 최대 ODI 국가로 부상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등락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패턴이나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해외 자원 개발, 첨단 기술 및 브랜드 확보,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저우추취(走出去)'라는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였고, 2015년 이후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추진과 연계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BOE의 하이디스 인수(2003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2004년), 안방보험의 동양생명(2015년)·알리안츠생명(2016년) 인수, 초상증권의 한국시장 진출(2017년) 등 일부 대형 투자 건에 따라 등락을 반복함.

2) 구조 변화

■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 위주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 내 투자 여건 및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 업종, 목적, 주체, 건당 규모, 대상 지역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됨.**

- [업종]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제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내 투자 대상 업종은 중국 내수시장 확대와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확대·고도화되고 있음.

○ 제조업 투자 비중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80.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13] 투자 비중은 16.9%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제조업] 1990년대 중후반까지 전자 제품 및 부품, 섬유, 의류, 피혁, 플라스틱 등 저임금 활용을 위한 가공무역형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전·자동차 및 부품·ICT·석유화학·철강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LCD, 반도체 및 제조장비, 자동차강판,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위주로 재편·고도화됨.

※ 2021년 대중국 제조업 투자액은 59억 1천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5개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2.1%) △전기장비 제조업(15.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8.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7%) △1차 금속 제조업(2.4%)임.

○ [서비스업] 서비스업 투자는 1990년대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위주에서 점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투자 대상이 확대되

12) 2001년 삼성전자 후이저우, 톈진 휴대폰 공장, 2002년 현대차 베이징 공장, 2006년 SK하이닉스 D램 우시 공장 등 대기업 진출이 이 시기에 추진됨.

13) 서비스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업종대분류 중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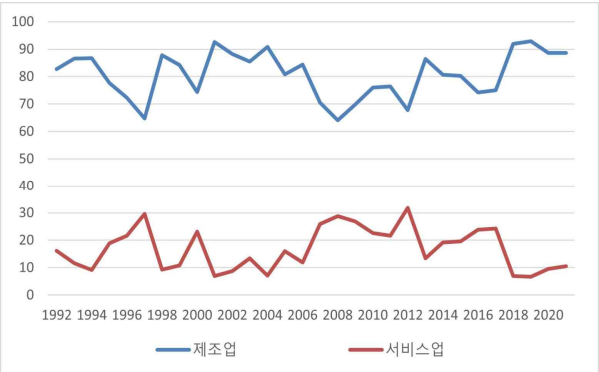
었고, 중국의 금융 개방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액은 7억 6백만 달러이며, 투자 비중 상위 4개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8.1%) △도매 및 소매업(31.7%) △금융 및 보험업(9.3%) △정보통신업(5.6%)임.

- [목적] 대중국 투자 목적은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였는데, 1992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 촉진과 저임 활용을 위한 투자 위주였으나, 2005년 이후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급증하였고, 2021년에는 선진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도 확대됨.
  - ○ 투자금액 기준으로 1992년에는 수출 촉진 5,900만 달러(42.7%), 저임 활용 3,300만 달러(23.9%), 현지시장 진출 1백만 달러(0.7%)였으나, 2021년에는 현지시장 진출 45억 달러(67.3%), 선진기술 도입 18억 8천만 달러(28.1%), 수출촉진 1억 6천만 달러(2.5%), 저임 활용 9천만 달러(1.3%)를 기록함.
- [주체 및 건당 규모] 투자 주체는 수교 초기에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기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2년 이후에는 대기업 비중이 80~90%에 이르고 있음.
  - ○ 대중국 투자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82%에서 2021년 6.3%로 대폭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비중은 같은 기간 17%에서 93.2%로 급증하였음.
  - ○ 건당 투자 규모[14]는 1992~2001년 103만 달러의 중소형 투자에서 2002~11년 195만 달러의 중대형 투자로 증가하였고, 2012~21년에는 771만 달러로 투자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15]
- [지역] 투자 지역은 수교 초기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고 가공무역에 유리한 산둥성, 동북3성, 톈진시에 집중되다가 투자 환경이 양호한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등 동부 연해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3년 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첨단제조 기반이 양호한 장쑤성, 광둥성, 상하이 등 동부 지역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3.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 서비스업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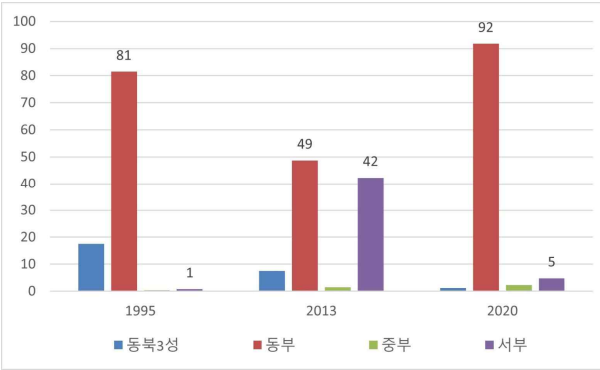
(단위: %)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그림 14. 한국의 대중국 지역별 투자 비중[16]

(단위: %)



주: 투자금액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14) 건당 투자 규모=투자금액/신규법인 수.
15) 한국수출입은행 데이터를 참고하여 계산.
16) 중국 4대 지역분류는 △동북3성: 길림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동부 연해지역: 장쑤성, 광둥성, 푸젠성, 베이징시, 산둥성, 상하이시, 저장성, 톈진시, 허베이성, 하이난성 △중부지역: 장시성, 산시(山西)성, 안후이성,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서부지역: 간쑤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산시(陝西)성, 윈난성, 티베트자치구, 충칭시, 칭하이성 등으로 분류함.

■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이 높으나, 일부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뚜렷한 추세 없이 시기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 1992~2021년 중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누적액(도착금액 기준)은 65억 5천만 달러로, 이 중 제조업은 35%(22억 9천만 달러), 서비스업은 63.6%(41억 6천만 달러)를 차지함.
  - ○ 동 기간 제조업 투자(누적액 기준)는 운송용 기계, 화공, 기계 장비·의료정밀, 전기·전자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 업종이 전체 제조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3%를 차지함.
  - ○ 동 기간 서비스업 투자(누적액 기준)는 금융·보험, 부동산, 도·소매(유통),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 업종이 전체 서비스업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8%를 차지함.
-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2~2001년에는 서비스업 중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다가 2002~05년에는 운송용 기계, 전기·전자, 화공 등 제조업 투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하였다가, 2006년 이후 다시 금융·보험, 부동산 등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확대됨.
  - ○ 2016~19년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 중 기계장비·의료정밀에 대한 투자(3억 5천만 달러)가 크게 확대된 것도 특징임.

표 6. 최근 5년간 중국의 대한국 업종별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업종	2017	2018	2019	2020	2021
제조업 전체	52.0	132.9	111.5	63.0	37.4
화공	27.0	1.6	3.3	4.9	0.8
기계장비·의료정밀	0.2	96.6	80.3	4.7	0
전기·전자	19.1	21.1	9.7	17.9	18.5
서비스업 전체	145.5	653.2	73.4	125.0	10.0
도 · 소매(유통)	38.5	42.2	35.1	15.2	7.3
음식 · 숙박	13.9	4.3	6.4	2.3	1.2
운수 · 창고(물류)	2.3	0.6	10.0	0.9	0
정보통신	13.0	7.1	4.8	6.8	0.4
금융 · 보험	1.7	589.8	0	0.6	0.1
부동산	41.2	3.5	11.7	86.4	0
연구개발 · 전문 · 과학기술	31.9	2.7	1.5	2.2	0.7

주: 도착금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3) 현안 과제

■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 저하] 한국의 대중국 투자의 수출입 유발 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대중국 투자와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점검·전환 및 대중국 투자의 신모멘텀 창출이 필요함.

- 재중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단위당 대중국 수출 유발 효과[17]는 2005년 2.1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

17)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 = 수출입/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잔액.

하락하여 2020년 0.6을 기록함.

○ 수입 유발 효과도 2011~12년 최고치인 2.2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20년 0.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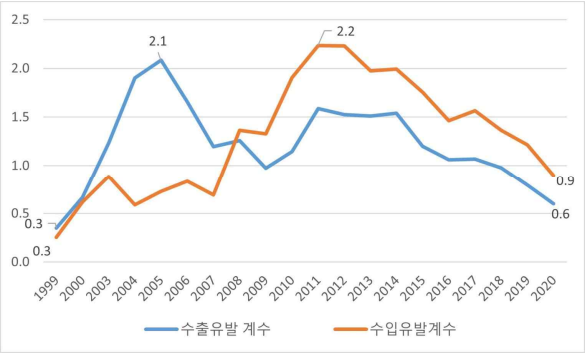
- 이는 과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중국 내 생산 및 판매 또는 제3국 수출 증가→기업 내 무역 거래 증가→한·중 수출입 증가→대중 투자 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점차 약화된 데 기인함.

○ 중국시장 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재중 한국기업의 매출액/투자액 배율 및 영업이익률은 각각 2013년 최고치인 7.3배, 4.9%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여 2020년 2.7배, 2.25%를 기록함.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의 부분적 매각을 통한 탈중국화 또는 사업 전환 등 중국 사업의 제2차 구조조정(2018년~현재)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노동집약적 업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력 산업인 동시에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가전사업, 자동차, 휴대전화, 철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새로운 대중국 투자와 비즈니스 전략으로의 전환 및 신산업·서비스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모멘텀 창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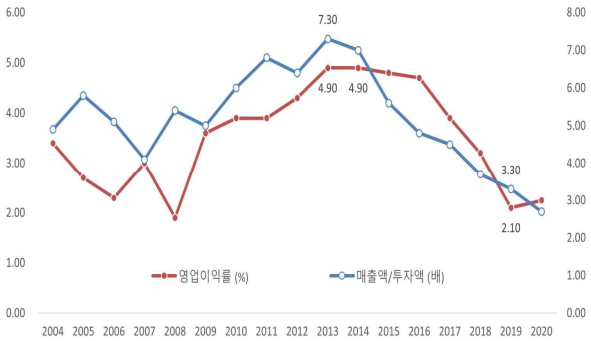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단위당 수출입 유발 효과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6. 재중 한국기업의 매출액/투자액 배율 및 영업이익률

(단위: %(좌), 배(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기업 경영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투자 비대칭성 심화] 한·중 간 직접투자는 한국의 대중국 투자 위주로 단방향의 비대칭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최근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소수의 대형 M&A를 제외하면 저조한 수준임.

○ 1992~2021년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누적액은 823억 3천만 달러로 동 기간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65억 5천만 달러)의 12.6배 수준임.

○ 최근 5년(2017~21년)간 한국의 대중국 투자(250억 7천만 달러)는 중국의 대한국 투자(14억 6천만 달러)의 17.2배로 확대되어 한·중 투자의 비대칭적 구조는 더욱 심화됨.

- 중국기업과 자본이 글로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중 공급망 안정 및 우리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중국자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첨단 제조 분야에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유치를 확대하여 한·중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생산 네트워크를 넘어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미·중 전략 경쟁 심화, 기술 유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적인 투자 유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함.

■ [대중국 투자 리스크 증대] 2018년 이후 본격화된 미·중 전략 경쟁은 새로운 대중국 투자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견제 분야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산업 대부분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많이 진행되어 한·중 간 긴밀한 공급망을 형성하였거나 한·중 간 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이므로, 미·중 경쟁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각각 중국의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견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과 공급망으로 연결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팹 4 등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 내 비즈니스 추진에서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 금융·통화

1) 한·중 금융기관의 진출 현황

■ 한·중 수교 후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이래로 한·중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사의 다양한 채널로 추진되어 왔음.

- 현재 중국 내 한국 금융회사는 총 61개 사로, 은행(16개), 보험사(16개), 증권사(13개), 자산운용사(9개), 여신전문사(7개)가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한국 내 중국 금융기관은 은행 6개, 증권사 1개, 보험사 2개 사임.

○ 한국 금융기관의 분포 특징으로 은행은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등 한국업체가 많은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보험사와 증권사는 대부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자본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함.

○ 6개의 중국계 은행은 서울, 대구, 부산 등의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2015년)과 한국 알리안츠생명(2016년)을[18] 인수하여 한국 보험시장에 진출함.

○ 2017년 중국 초상증권이 한국 금융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인가받음으로써 중국 본토 증권사 중 최초로 국내에 진출함.

18) 알리안츠생명은 ABL로 회사명을 변경함.

표 7. 한·중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현황

한 → 중 (61개)	은행 (16개)	현지법인(5개), 사무소(3개), 지점(8개) 우리은행(2007), KEB하나은행(2007) 신한은행(2008), 기업은행(2009), 국민은행(2012)
	보험사 (16개)	설립 형태별: 현지법인(6개), 사무소(8개), 지점(1개) 보험사 성격별: 생명보험사(5개), 손해보험사(10개) 삼성화재(2005),[19] 삼성생명1(2005), 현대해상(2007), KB손해보험(2009), 삼성생명2(2012), 한화생명(2012)
	증권사 (13개)	현지법인(3개), 사무소(9개) 한국투자증권(2010), NH투자증권(2011), 하나금융(2011)
	자산운용사 (9개)	현지법인(7개), 사무소(2개) 에셋플러스(2004), 미래에셋(2008), 로버스트(2009), 한국투자신탁(2010), 삼성(2016), 한화(2016), KB자산운용(2018)
	여신전문사 (7개)	현지법인(7개) 효성캐피탈(2007), 비씨카드(2008), 롯데캐피탈(2011), 현대캐피탈(2012), NH농협캐피탈(2016), 우리기술투자(2018)
중 → 한	은행	6개 지점: 중국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산은행, 중국광대은행, 중국농업은행
	보험사	중국 안방보험이 동양생명과 ABL(이전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하여 한국 보험시장에 진출
	증권사	초상증권(2017)

주: 표에 명시한 중국 진출 한국 금융사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기관이고 ( ) 안의 연도는 개설 연도임.
자료: 금융감독원 해외점포 현황(2022년 3월 기준), 금융감독원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2021년 기준) 및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한·중 금융협력은 수교 이후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에 따라 발전하였고,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계기로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 전 분야에 걸쳐 한국 금융기관의 대중국 진출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중국 내 수익 악화로 인해 일부 축소되는 양상을 보임.

- [은행]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중국 베이징 연락사무소를 설립했으며,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대외개방 추진과 함께 한국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였으며, 2006년 말 중국이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 취급지역, 고객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이 점진적으로 확대됨.
  - ○ 2014년 말 '지점 설립 전 2년간 연락사무소 운영 규정' 폐지, 위안화 영업신청 자격 조건 완화 등 외자은행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현지 영업환경이 개선되었으며, 2019년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 심사·비준 절차가 폐지되고 위안화 업무범위 제한이 전면 폐지되면서 한국계 은행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
- [보험] 1995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중국의 보험업 분야 대외개방이 추진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의 중국 진출이 추진됨.[20]
  - ○ 2003년부터 외국계 비생명 보험사의 중국 내 법인 설립 및 업무 제한이 철폐되면서 한국계 생명·손해·화재 보험사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시작함.
  - ○ 2018년 이후 외국계 보험사에 대한 '현지법인 설립 전 연락사무소 운영 및 외자 지분 비율 제한' 취소 등

19) 삼성화재는 2022년 중국 텐센트 등과의 합작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완료된 합작법인 주주는 삼성화재(37%), 텐센트(32%), 위싱과학기술회사(11.5%), 맘바트투자발전(11.5%)으로 구성됨. 이데일리(2022. 8. 12), 「삼성화재 중국 법인, 텐센트와 합작법인 전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9046632426664&mediaCodeNo=257(검색일: 2022. 8. 13).
20) 중국은 WTO 가입 직후 외국계 손해보험사의 지사 설립과 중외 합자(외자 51% 미만) 설립만 허용하다가 2003년에 외자 독자 설립을 허용하였고, 생명보험사는 2004년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外资保险公司管理条例)에 따라 중외 합자(외자 50% 이하) 설립만 허용하여 현재까지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규제가 완화되면서 합작법인에 대한 자본 확충을 통하여 한국계 보험사의 현지 영업기반이 강화됨.

-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부분적으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중국 증권시장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한국계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중국시장 진출 가능 분야가 대폭 확대됨.
  - ○ 과거 한국 금융기관은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21] 및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22] 자격을 취득하거나 중국기업과의 합자회사[23]를 통해서만 중국 본토 증시 투자가 가능하였음.
  - ○ 2008년 푸르덴셜운용자산이 국내 최초로 QFII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RQFII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20년까지 QFII 자격을 보유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16개,[24] RQFII 자격 보유기관은 36개[25]로 확대됨.
- 하지만 최근 한국기업의 중국 내 업무 축소가 심화되면서 한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계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며, 증권사를 중심으로 일부 현지법인의 철수가 이루어짐.
  - ○ 이에 따라 증권사의 현지법인은 11개(2015년)에서 3개(2021년)로 축소되었으며, 한국계 은행은 2014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중국법인이 합병된 이후 추가 법인 설립 없이 5개 현지법인이 유지되는 상황임.[26]

2) 한·중 금융·통화 협력 현황

■ [통화 협력]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 결제통화 다변화 및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따라, 한·중은 통화스와프와 원/위안화 직거래 인프라 구축 분야의 통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통화스와프] 한·중은 양국간 무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중 통화스와프를 체결함.[27]
  - ○ 2002년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었고, 2008년 300억 달러에서 2011년 560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한·중은 3차 계약 갱신을 통해 통화스와프 협력 규모를 59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28]
- [직거래 시장] 한·중은 결제통화 다변화를 통한 국제결제 시장 안정화 및 위안화 역외 결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함.
  - ○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원/위안화 청산은행 설립을 추진하여 양국의 금융통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장려하기로 합의함.

---

21)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증권시장(A주) 내 투자 자격을 지닌 외국인 투자기관.
22) 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직접 조달한 위안화(RMB)로 중국 증권시장(A주) 내 투자 자격을 지닌 외국인투자자.
23) 중국은 외국계 증권사의 독자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외 합자 설립의 경우 외자 지분을 1/3까지 허용하다가 2012년 외자증권투자회사설립규정(外资参股证券公司设立规则)에 따라 49%까지 허용하고 있음.
24) 外汇管理局(2020. 5. 29), 「合格境外机构投资者 (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https://www.safe.gov.cn/safe/2018/0425/8881.html(검색일: 2022. 8. 16).
25) 外汇管理局(2020. 5. 29), 「合格境外机构投资者 (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https://www.safe.gov.cn/safe/2018/0425/8882.html(검색일: 2022. 8. 16).
26) 2015년 국내증권사 현지법인은 총 11개였지만, 2022년에는 3개로 축소됨. 최근까지 중국시장에서 철수한 국내 증권사(철수 연도)는 키움(2016), 한화(2016), 유안타(2017), 대신(2018), 동부(2018), 케이프(2019), KTB(2020), 미래에셋대우(2022)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21),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27) 정영식 외(202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9, pp. 10~11.
28) 2013년과 2017년에는 2011년의 계약을 연정하여 56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유지함. Reuters(2017. 10. 13), https://www.reuters.com/article/更新版 1-中韩金融：两国将规模560亿美元的双边货币互换协议再延长三年-idCNL4S1MO24Z(검색일: 2022. 8. 16).

○ 서울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2014년 7월에 개설되었고, 서울 소재의 중국교통은행이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되었으며, 상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2016년 6월에 개설되었고, 중국 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원화 청산 업무를 개시함.

○ 한국 외환은행의 현물환 일평균 거래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 직거래 시장 설립 이후 위안화 거래가 일평균 1억 6천만 달러(2014년)에서 24억 7천만 달러(2015년)로 급증하였다가 최근 6년간 큰 변동 없이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직거래 시장의 거래 규모는 시장 개설 초반 일평균 1억 6천만 달러(2014년)에서 24억 7천만 달러(2015년)로 급증하였다가 최근 6년간 큰 변동 없이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위안화 월별 직거래 규모는 2021년 5월 기준 4억 2,400만 위안으로 한국 직거래 시장 거래 규모보다 작은 수준임.[29]

표 8. 한국의 외국환은행 현물환 일평균 거래 규모

(단위: 억 달러, %)

통화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중 (2020)
KRW/USD	142.6	145.4	145.2	138.9	153.4	137.6	147.2	72.4%
KRW/CNY	**1.6**	**24.7**	**20.0**	**21.0**	**18.8**	**23.6**	**22.9**	**11.3%**
JPY/USD	6.7	5.8	7.2	9.5	7.9	6.8	5.3	2.6%
USD/EUR	9.2	9.7	7.4	9.3	12.7	10.1	10	4.9%
KRW/기타	5.3	5.6	5.5	6.3	7.7	6.3	6.7	3.2%
기타	9.9	8.6	9.0	11.0	12.8	13.9	11.1	5.5%
합계	**175.3**	**199.8**	**194.3**	**196.0**	**213.3**	**198.3**	**203.2**	**100.0%**

주: 1) 현물환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외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함.
2) KRW/CNY는 2015년부터 집계되었으며, 역외 위안화(CNH)[30]를 포함한 수치임.
3) KRW/기타는 위안화를 제외한 원-기타화폐 거래량으로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가 계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은행(2021. 1. 28), 「2020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 p. 2; 한국은행(2018. 2. 22), 「2017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동향」, p.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자본시장 협력] 중국 자본시장 내 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고 본토-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한·중 간 자본시장 협력이 다양한 자본시장 교류 및 국제협력 채널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음.

- [자본시장 라이선스 완화] 최근 국경간 증권시장 투자를 관리하는 라이선스 제도가 완화되어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채널이 확대됨.

○ 수교 이후 한·중 금융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보유한 QFII 한도는 77억 4,800만 달러로 확대되었고, RQFII 투자 한도는 731억 8천만 위안으로 확대됨(2019년 기준).[31]

○ 중국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2018년 QFII/RQFII를 통한 외환 송금 한도를 폐지하고, 2019년 9월 QFII/RQFII 개별 기관 및 국가별 투자 한도 역시 폐지하여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중국 증권시장 투자 채널이 확대됨.

○ 중국 기관투자자의 해외 증권시장 투자를 관리하기 위한 '적격 국내기관 투자자(QDII)'[32]의 한도도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에 투자된 중국 펀드 규모는 약 4억 6,162만 위안(2021년 3/4분기 기준)으로, 해외

29) 정영식 외(202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9, p. 14.
30) 역내 위안화(CNY)는 중국 본토 외환거래에서 사용되는 위안화를 의미하고, 역외 위안화(CNH)는 중국 본토 이외 지역의 외환거래에서 사용되는 위안화를 의미함.
31) 外汇管理局(2020. 5. 29), 「合格境外机构投资者 (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https://www.safe.gov.cn/safe/2018/0425/8881.html; 外汇管理局(2020. 5. 29), 「合格境外机构投资者 (QFII) 投资额度审批情况表」, https://www.safe.gov.cn/safe/2018/0425/8882.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8. 16).
32) 적격 국내 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해외 자본시장에 투자할 자격을 지닌 중국 금융기관.

투자 규모로 볼 때 4번째로 높은 수준임.[33]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QDLP,[34] QFLP,[35] WFOE PFM[36] 등의 다양한 자산운용업 라이선스를 허가하였으며, 한국계 자산운용사들이 라이선스 취득을 통해 중국 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증권 교차거래] 중국은 해외 개인의 중국 본토 증시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콩 증권거래소와 상하이·선전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가 가능한 후강퉁(沪港通)과 선강퉁(深港通)[37]을 각각 2014년, 2016년에 도입하였음.

○ 후강퉁과 선강퉁의 주식 교차거래 프로그램은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의 중국 본토 증권시장 투자를 허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교차거래를 활용한 한국의 중국 본토 증권시장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기준 후강퉁 거래 규모는 7억 2,667만 달러, 선강퉁 거래 규모는 16억 7,391만 달러를 기록함.[38]

표 9. 시기별 한·중 금융협력 특징 및 주요 내용

한·중 관계	양국 금융협력 특징	주요 내용
우호협력관계 (1992~97년)	수교 후 양국의 교역 급증에 따른 금융협력 추진	• 1992년 외환은행이 국내 은행 최초로 베이징에 연락사무소 설립 • 양국은 매년 금융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협력 발전을 논의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1998~2002년)	아시아 외환위기 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 양국의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은 상호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교환과 인력지원을 활성화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출범하여 역내 국가의 공조체제하에 한·중 금융협력을 추진
협력동반자관계 (2003~07년)	중국이 WTO 가입 후 외국 금융기관 규제를 일부 완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점진적으로 확대	• 중국이 WTO 가입 직후 외자보험사 설립조건을 완화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 • 2006년 11월 중국이 외자은행관리조례(外资银行管理条例)를 통해 외자은행 규제를 완화한 이후 한국계 은행이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확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14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부문에 충격이 발생하자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방 확대와 제도적인 금융협력을 추진	• 2008년 1,800억 위안(3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고, 2011년 3,600억 위안(76조 원)으로 규모 확대 • 2008년 한국 투자기관이 QFII 자격을 취득하여 중국 증권시장에 참여 •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RQFII 자격 취득 및 투자한도 확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과 청산은행 구축 추진
경쟁적 협력동반자관계 (2015년~현재)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한·중 간 금융협력 채널이 확대 및 다변화	• 2015년 한·중 FTA 체결 • 2016년 한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 • 후강퉁(2014년), 선강퉁(2016년), 채권퉁(2017년) 등의 자본시장 투자 채널 확대 • 2019년 QFII/RQFII 투자한도 폐지

자료: 현상백 외(2017),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협력 성과 및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6, p.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3) 이는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지역의 순위를 의미하며, 기타 순위로 1위는 미국(555.4억 위안), 2위는 베트남(37.8억 위안), 3위는 독일(6.4억 위안)임. 东方财富网(2021. 11. 2), https://fund.eastmoney.com/a/202111022165529860.html(검색일: 2022. 8. 16).

34) Qualified Domestic Limited Partner, 적격 국내 유한책임 투자자. 중국에 소재한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중국 본토에서 조달된 펀드자금을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35) Qualified Foreign Limited Partner, 적격 외국인 유한책임 투자자. 일정 조건을 만족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 역외조달 자금을 중국 본토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36)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 Private Fund Management, 외자독자 사모펀드 운용사. 회국계 자산운용사의 단독법인이 중국 본토에서 사모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37) 후강퉁: 상하이와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 제도; 선강퉁: 선전과 홍콩 증권거래소 간 교차거래 제도.

38) 거래 규모는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한 값임. 한국예탁결제원 DB,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ovsSec/BIP_CNTS10012V.xml&menuNo=862(검색일: 2022. 8. 17).

3) 한·중 금융협력의 현안과제

■ [한국계 금융기관 수익 양극화] 중국이 자본시장의 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화를 진행하였던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은 개선된 반면, 한국계 증권사의 적자는 최근 5년간 지속되고 있음.

- 2010년부터 한국계 금융기관의 주요 업무 대상이었던 국내 기업의 대중국 투자 감소로 인해 중국 진출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함.
-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은행과 보험사는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수익 개선을 이루었지만, 현지 업무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던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계 금융기관간의 수익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
  - ○ 은행과 보험사는 중국기업과의 제휴 및 합작사 설립을 통하여 현지 고객 확보를 추진[39]하였고 2018년부터 수익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증권사 현지법인은 2017년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이후 중국은 QFII/RQFII 투자 한도 폐지, 외자기업 지분참여 상한선 개방 등의 조치를 통해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한국계 금융회사의 중국 진출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한국계 증권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지 증권사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금융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수익 모델 창출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 인프라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표 10. 중국 진출 한국 금융기관의 순이익 추이(2015~21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은행	20.9	22.7	108.3	153.8	101.0	99.0	144.0
보험	-	0.3	-15.7	22.7	69.9	45.6	90.8
증권사	-0.3	0.3	-0.8	-1.3	-1.6	-1.4	-0.5

자료: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국내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 지표 평가 결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용 저조] 2014년 한·중 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청산은행을 설립하여 자국 통화의 무역결제 비중 확대, 거래비용 및 환 리스크 감소를 기대했으나, 아직까지 기대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대중국 무역의 주된 결제통화는 여전히 달러이며, 위안화 및 원화 결제 비중은 모두 한 자릿수의 비중을 기록함.
  - ○ 최근 대중국 수출입에서 달러 결제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87% 이상의 무역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안화는 약 7%, 원화는 3%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 ○ 위안화 결제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한국기업들이 달러 사용을 통해 기업의 외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국내 저조한 위안화 유동성으로 인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40]
- 이에 대하여 한·중 양국 금융기관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및 운용 상품 개발을 통해 원/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9) 대한금융신문(2021. 9. 8), 「'계륵'서 '효자' 된 은행 중국법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23(검색일: 2022. 8. 17).
40) 정영식 외(2022),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경과와 우리나라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오늘의 세계경제』, Vol. 22, No. 9, p. 14.

그림 17. 대중국 수출의 결제통화 비중

(단위: %)

그림 18. 대중국 수입의 결제통화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 4. 22), 「2021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pp. 2~3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시사점

가. 미래 한·중 경제협력 방향

■ [한·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관리] 글로벌 지정학·지경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한·중 경제협력이 위협을 받는 현실을 반영하여 한·중 경제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국경제 성장 둔화 및 발전전략 전환(차이나 리스크), 경쟁적 구조로 전환되어 가는 양자 협력구조 전환 리스크, 미·중 전략 경쟁 리스크(인태지역 협력 주도권 경쟁, 공급망 재편 경쟁, 지경학적 리스크 및 국제경제 질서 재편 등), 돌발 변수 리스크(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대만 갈등 확대 가능성) 등 한·중 경제협력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대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미국과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기로 합의('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하였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에 기반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적 한·중 관계'를 구축('22년 8월,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하고자 함.
  - ○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은 해외 공급 측 충격에 대한 공급망 안정 확보와 함께 미국과 기술 및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41]
  - ○ 한국의 중간재 중 28.4%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국 중간재 수출의 27.9%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안보 정책은 한·중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 [추진 방향] 미래 한·중 경제협력은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적인 양자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지역 및 다자 체제에서의 개방과 포용주의 견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41) 지만수(2022. 8), 「지정학 시대 경제안보 정책의 쟁점과 방향」, 『금융브리핑』, 제31권 16호.

-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 활성화] 민간 주도의 한·중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협력 제약'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됨.
  - ○ 특히 한·중 양국 정부는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가 한·중 경제협력에 주는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협력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양자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 FTA 활용도 제고] 한·미 포괄적 동맹과 병행하여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미·중 경쟁의 틀을 회피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중 투자·서비스 협상을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경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신분야에서 상호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및 다자 체제에서의 한·중 협력 강화] RCEP, 한·중·일 FTA, CPTPP 등 지역협의체, G20 등 다자체제 및 다양한 복수간 협정에서 '개방주의'와 '포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 추진이 요구됨.

나. 무역: 한·중 통상관계의 안정성 및 질적 제고 추진

■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 중간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중 양국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협의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팬데믹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로 경제적 비용 최소화보다 경제안보를 고려한 적정 비용을 추구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공급망 재편 및 관련 리스크가 지속될 전망임.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한·중 양국의 공급망에 교란이 발생할 경우 그 리스크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상호간 정보 비대칭에 의한 공급망 불안정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양국은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수출 규제 등 공급망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의도치 않은 공급망 충격이 발생할 경우 협의 채널을 통해 신속히 소통과 대응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공급망 리스크 대비] 중간재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요인인 '과도한 의존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등 공급망 리스크 상시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망 리스크는 천재지변, 전쟁 및 정치적 리스크 등에 의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공급망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킴.
-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원자재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중요 자원이 대부분이므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해외 광물기업과의 협력 및 해외광산 개발을 통한 전략자원 확보, 광물 제련/가공품의 수입선 다변화, 중요 자원의 재활용/재이용 기술 및 대체제 기술 개발, 친환경 자원 가공기술 개발, 해양자원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
  - ○ 세계 자원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높은 만큼 중국의 광산기업 및 소재기업 등과의 안정적인 협력 역시 중요함.

■ [무역의 질적 제고] 한·중 양국은 무역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심화된 경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상호 수요 확대 및 미래 성장 분야 등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한·중 무역의 양적 성장이 둔화하고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 구조가 전환되고 있어 상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함.
- 중국의 고령화, 소비 고도화, 디지털/그린 전환 및 산업육성 정책 등과 한국의 다양성 및 기술 비교우위가 접목되어 상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바이오/의료, 실버 및 그린 소비, 프리미엄 소비재, 그린 건축, 수소경제 분야 등에 대한 민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바이오/의료 기술, 의약품/치료제,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한·중 간 민간 협력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재의 경우 중국의 e커머스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품질 제고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신규 협력 분야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소비재 및 관련 서비스의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 정치적 리스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지재권 보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 업그레이드] 한·중 FTA가 한·중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품 협정의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종합적인 서비스·투자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양국간 상호 교역 3,000억 달러, 상호 직간접 투자 2,500억 달러, 인적교류 1,000만 명 시대에 부합하는 FTA 협정으로 만들어가야 하며, 미·중 전략 경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야 함.
- 한·중 FTA 상품 협정 개정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통해 디지털·탈탄소화 관련 상품 무역과 투자에서 상호 무관세화와 완전한 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디지털 관련 상품, 탈탄소화 관련 장비와 상품, 미래형 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무인자동차) 분야의 무관세화와 상호 투자 제한의 완전한 철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방적인 한·중 간 서비스·투자 협정을 통해 상품 무역 3,000억 달러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등 신협력 어젠다에서 한·중 간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이 요구됨.
  - ○ 한·중 서비스 무역의 확대 방향으로 전통적 서비스 무역 이외에도 제조업간 융합을 통해 원격교육, 원격의료, 스마트관광, 창의적인 콘텐츠의 공동 제작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무역 협력을 추진해야 함.
    ※ 한·중 서비스 무역 규모는 상품 무역의 9% 미만으로, 이는 한국의 서비스·상품 무역 비중(20.5%)뿐만 아니라 중국의 서비스·상품 무역 비중(13.7%)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미·중 경쟁의 틀을 회피할 수 있는 한·중 협력 프레임워크로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포괄적인 경제협력 협상으로 전환하고, 협정 안에 공급망 안정, 디지털, 환경 등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챕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다. 투자: 한·중 상호 투자 활성화 및 비경제적 리스크 대비

■ [신산업 투자 확대]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신산업에 대한 대중국 투자 확대를 통해 모멘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는 전기·전자, 휴대전화, 승용차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범용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로봇,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의료·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해야 함.
  - ○ 중국정부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 중국 내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중국 투자 확대가 필요함.
  - ○ 중국은 글로벌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신산업의 업그레이드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서비스업 투자 확대]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업 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화, 그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신흥 서비스업에 대한 협력 확대가 필요함.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추진을 통해 중국 서비스업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관광, 의료, 문화 등 전통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뿐만 아니라 디지털화, 그린화, 스마트화 과정에서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신흥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와 시장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한·중 양국 모두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와 스마트 팩토리가 연계된 신흥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홍콩 CEPA를 참고하여 한·중 간에도 적시에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보충 협정 체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와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 시장 개방정책을 연구·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한·중 서비스업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자본 활용방안 모색] 최대 ODI 국가로 부상한 중국 자본을 활용하여 한국산업의 고도화, 공급망 안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ODI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최초로 중국 ODI가 FDI를 초과하여 자본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최대 ODI 국가로 부상했으나 중국 자본의 대한국 투자는 저조한 수준임.
- 중국의 거대한 자본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고, 공급망 안정에 유리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동시에 한국의 핵심 기술이나 공정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고, 한국 경제·사회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됨.

■ [대중국 투자 방식의 다각화] 기존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그린필드 방식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라 M&A, 기술 투자 등으로 투자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 미·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쌍순환 전략에는 중국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의 공급망에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좐징터신(专精特新)'으로 일컬어지는 강소기업 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제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공급망과 공생·공존하면서 중국 제조업 고도화에 따른 결실을 공유하는 전략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기존의 그린필드 방식 투자에서 벗어나 M&A 또는 기술 투자 등의 투자 방식 다각화를 통해 한·중 양국이 '윈-윈'하는 구도를 형성해야 함.
  - ○ 중국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전 잠재력, 수익성 측면뿐만 아니라 주요 광물 및 원자재와 같은 공급망 안정을 고려한 투자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비경제적 리스크 대비] 대중국 투자 시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중국 내 경제사회 발전전략 변화 등을 고려하여 비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과거에는 대중국 투자 시 주로 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였다면, 앞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리스크, 중국정부의 정책 및 규제 리스크 등 비경제적 요인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을 견제하는 분야에서는 대중국 투자 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 중국정부가 2050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두 번째 100년 목표를 향해 장기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및 규제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인태전략의 구체화 과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국 견제와 관련된 미국의 국내법 및 행정명령에 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이와 동시에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과 정책 변화, 중국 내 경제사회 발전전략 패러다임 및 기조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금융·통화: 녹색·디지털 금융 및 원/위안화 통화 협력 확대

■ [녹색·디지털 금융 협력] 글로벌 이슈가 접목된 녹색 금융과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금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여,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한·중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 진출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양극화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중 금융 협력 분야를 '글로벌 이슈를 접목한 디지털·녹색 분야'로 확대하여, 한국계 금융사가 현지 금융사와의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를 통하여 수익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간 관련 제도 협력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국제 금융협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녹색 금융] 한국 금융기업들은 중국 현지에서의 ESG 투자 및 해외 녹색채권 발행을 통하여 녹색 금융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관련 협력 프로젝트 개발과 한·중 정부 간 제도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또한 국제협력이 필요한 탄소 국경세와 국경간 탄소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협력 인프라를 구성하여 한·중 간 탄소금융 국제 표준화 수립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디지털 금융] 한·중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무역을 위한 금융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고, 산관학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하여 중장기 디지털 금융 협력공간 창출을 모색해야 함.
  - ○ 향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한·중 디지털 금융 협력 분야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여,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디지털 금융 협력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원/위안화 통화협력 확대] 양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원/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기반을 형성하고, 원/위안화의 통화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은 낮은 원/위안화 무역결제 비중과 원/위안화 투자 상품 부족 등의 이유로 통화협력 채널 활용이 많지 않은 상황임.
- 양국 통화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과 실물 교류가 있는 한국기업들이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중국기업들의 역외 위안화 대출, 한국 내 위안화 채권 발행 등의 원/위안화 환류 메커니즘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 한·중 양국이 모두 인정하는 '한·중 기업신용 평가사'를 설립하거나 한·중 금융사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시스템 구축[42] 등 원/위안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에 비해 금융·통화 협력이 부족한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여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이 경제·통상 협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통상 협력이 다양한 금융·통화 협력을 촉진하도록 양국의 실물경제와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KIEP

42) 한민수 외(2015), 「주요국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5-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